

특집

민선 6기 지방자치시대의 건설 공약 리뷰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

서울-안전·복지·창조경제 강조, 대규모 건설 투자 '난망'

백성준 | 한성대 교수

민선 6기를 출범한 서울시. 민선 5기가 격변의 시간이었다면 6기는 보다 안정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선거 공약과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이하 2030 서울플랜)을 중심으로 향후 4년 간의 서울시의 발전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들을 조망하며 건설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장단기 핵심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 희망플랜 2.0」에는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이란 비전과 ‘안전한 도시’, ‘따뜻한 도시’, ‘꿈꾸는 도시’, ‘숨 쉬는 도시’ 등의 4대 정책 목표가 있고 그 아래 13개 분야의 구체적인 핵심 과제가 있다. 한편, 박 시장은 민선 6기 시장 취임식에서 ‘안전’, ‘복지’, ‘창조경제’ 등을 강조하였기에 향후 4년 시정의 밑그림을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핵심 과제를 구분하여 정리해 보았으며, 마지막 부분에 건설 및 부동산 분야의 주요 정책에 대해 언급하였다.

첫째, 안전 측면이다. 시민의 안전한 삶을 시정의 제일 가치로 삼을 것이라는 취임사에서 강조한 안전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재난과 사고로부터의 안전,

범죄와 공포로부터의 안전, 불공정과 부패로부터의 안전, 질병과 공해로부터의 안전, 빈곤과 비인간적 환경, 불량한 먹거리로부터의 안전, 주거 불안과 일자리 불안, 교육 불안으로부터의 안전 등이다. 그리고 건설과 연관된 안전을 보면, 지하철, 한강 교량, 주요 터널, 고층 건물 등에 대한 고강도의 안전점검 및 재난 대책이 수립될 것이며,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방지 대책과 산사태 방재대책 등도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될 전망이다. 서울시 34곳의 상습 침수 구역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먼저 도림천을 개선 중이고 광화문, 연세대 앞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 우면산 산사태 이후 서울을 둘러싼 산악 지역을 전수 조사해 조치를 취했고 자연재해에 대해 계속 대비하고 있다.

둘째, 복지 측면이다. 박 시장은 취임사에서 현재의 위기를 전환의 기회로 삼고자 하며 그 바탕은 ‘사람’에 있고, 사람들이 서로 믿는 ‘신뢰’에 있으며,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있다고 역설한다. 주요 복지 관련 정책 과제로는 2030 서울플랜 중 ‘함께 사는 행복 서울’의 핵심 이슈인 ‘지역 특성 강화 및 낙후 지역 활성화’,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

급 다양화', '사회 경제적 약자 공공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창조경제 측면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창조경제'를 기치로 하며 그 중심은 사람과 다양한 산업 인프라임을 강조한다. 5대 창조경제 거점(신촌·홍대·합정 벨리, 상암DMC, 동대문 창조경제 클러스터, 구로G벨리, 개포ICT)과 3대 지식 기반 허브(마곡, 창동·상계, 홍릉)를 성장의 뿌리로 삼고 10만 창조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창조경제 관련 주요 정책 과제에는 2030 서울플랜 중 '경쟁력 있는 글로벌 서울'과 '매력 있는 역사문화 서울'의 핵심 이슈들인 '글로벌 중심 기능 강화', '新성장 동력 창출 및 고용 기반 확충', '신속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구축', '서울의 역사적 정체성 강화', '창의문화 도시 기반 강화', '아름다운 도시경관·디자인 창출' 등이 포함될 것이다.

시각을 달리하여 건설 및 부동산 측면의 정책 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박 시장은 5기 재임 기간 동안 건설교통 분야에서 별로 한 것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 '보도블록 10계명', '도로 10계명' 등을 만들어 디테일하고 소프트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하드웨어적으로 드러난 정책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민선 6기 건설교통 정책에서도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선진국 도시들처럼 가능하면 도심에 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대중교통 전용지구, 보행 우선지구를 확대해 걷거나 자전거를 타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신촌 연세대 앞의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모델로 각 자치구와 협의해 2014년에 대상지를 정하고 2015년에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자전거 시스템도 여의도·상암 등 기존 운영 지역과 한강이나 청계천, 각 지천변의 자전거 인프라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며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에서는 일부 차선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지정하는 '도로 다이어트' 까지 고려하고 있다.

한편, 시장 참여자들이 크게 주목하는 정책은 재개발과 뉴타운 사업의 정상화 또는 출구 전략에 관한 내용일 것이다. 그런데 박 시장은 민선 6기 선거 공약에서 대규모 재건축·재개발보다 소규모 도시재생에 주목하여 시장 회복의 기대감을 저상시켰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수요가 있고 여건만 조성된다면 추진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두고, 수직 증축 리모델링도 안전성 우려가 있다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항변하고 있지만 시장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인 것 같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서울시 민선 6기의 정책이 부동산 및 건설 시장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우선 대다수의 뉴타운 사업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기존에 투입된 매몰비용에 대한 처리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아 출구 전략이 마련되지 않고 상당 기간 답보 상태에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도시 정책에서 안전과 방재 등이 강조되면서 재난 관련 시설 투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기타 건설 및 부동산 분야에서는 개발보다는 관리에 대한 비중이 커지면서 신규 개발 투자는 감소할 것이다. 특히 교통 인프라에서는 하드웨어적인 시설 확충보다는 수요 관리에 초점을 두고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정책과 보행과 자전거 이용, 자동차 공유 등이 강조되는 추세에 있어 과거와 같은 건설 투자를 기대하기는 곤란하다. 그 밖에 복지 분야의 어린이집 짓기, 공공 임대주택 정책 등도 건설산업과 연관이 되지만 영향은 5기 때나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집

민선 6기 지방자치시대의 건설 공약 리뷰

경기도 - GTX 계속 추진, 임대 아파트 10만호 건설

이 상 대 | 경기개발연구원 미래비전연구실장

민선 6기 남경필 도지사는 ‘혁신과 소통’, ‘통합’, ‘데이터’ 도정을 지향하면서 ‘일자리가 넘치는 경기도’, ‘안전한 경기도’, ‘따뜻한 공동체 경기도’를 만든다는 정책 기초에서 출발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자리 정책은 맞춤형 무한지원 서비스 10만개, 2030 슈퍼맨펀드와 경제민주화 등 8만개, 지식서비스산업 15만개, 빅파이 프로젝트 7만개, 신성장산업 15만개, 규제 합리화와 투자 활성화 10만개, 사회적 일자리 5만개, 농축수산업 고부가가치화 등을 추진한다. 안전 정책은 빅데이터 재난 안전센터, 재난총괄조정회의, 위계임 재난훈련센터, 흙 방법 서비스 지원, 어린이 안심 등하교길, 범죄 사각지대 CCTV 설치, 안심택시제도, 키즈존 지정, 앞아가는 굿모닝 버스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공동체 정책은 따뜻하고 복된 마을 공동체인 ‘따복마을’ 6,000개 조성, 따복지킴이, 사회 일자리 1만 8,000개 창출, One Stop 통합 복지 서비스망 구축, 직장 내 보육시설 확충 지원, 어르신 문화즐김센터 건립, 찾아가는 의료검진 서비스, 중증 장애인 의료비 지원, 다문화 가정 지원 등을 역점으로 추진하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건설과 관련된 공약들을 살펴보면, 교통 분야로는 △바로라고 앞아가는 굿모닝버스를 위한 10개 광역 버스 멀티 환승 터미널·맞춤형 따복버스·좌석예

약제 실시, △혈관 같은 도로를 위한 민자 고속도로 사업 재구조화(재정 도로), 그리고 △신경망 같은 철도를 위해 KTX 및 GTX 서비스 확충·경기 북부 철도망 확충·수도권 광역철도공사 설립 검토 등을 제시하였다.

주택 분야로는 임기 내 기존 주택 매입·전세 임대 3만호 공급(4년 간 2.7만호), 신규 임대 아파트 10만호 건설(공공 임대주택 4년 간 9만 3,900호), 지역별 표준 월세 임대료 기준 제시를 통한 전월세 상한제, 저소득층 월세 임대료 지원을 위한 주거 급여 도입, 신혼부부 및 청년 실업자와 대학생 등을 위한 주거 지원 확대, 소규모 생활 맞춤형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권역별 개발 분야로서 DMZ 평화통일벨트, 미군 반환공여지 신발전지역, 문화콘텐츠 집적단지, 친환경 생태관광·레저벨트, 서해안벨트, 첨단 과학·연구단지,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 등 ‘7대 특성화벨트’ 전략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경기 북부 지역 발전 분야는 경기북부 10개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교통, 철도 인프라(제2 순환고속도로 등)를 확충하며, 평화통일경제특구 조성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민선 6기 남경필 도정은 이전과는 달리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공약과 정책 사업

내용이 주를 이룬다. 민선 1기 이인제 도정은 서해안 개발 구상을 추진한 바 있고, 2기 임창열 도정은 “경제의 재도약 기반 마련”을 슬로건으로 해서 경기 북부 지역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어 민선 3기 손학규 도정은 “세계 속의 경기도”를 슬로건으로 하여 광교와 판교 신도시 개발을 착수하였으며, 민선 4, 5기 김문수 도정은 동탄2 신도시, 서해안 시화지구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조성과 화성호 주변의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민선 6기 남경필 도정은 이전과 달리 신도시 개발

이라든지, 신규 철도 건설 제안 등 대규모 건설 중심의 공약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GTX 건설 계속 추진이라든지 앞아가는 굿모닝 버스를 위한 멀티 환승 터미널 건설, 또 공공 임대주택 9만 3,900호를 포함한 신규 임대 아파트 10만호 건설 등은 이전과는 달리 도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확충 건설 공약으로 해석해도 무방한 부분이다. 이렇게 본다면 민선 6기 남경필 도정은 복지, 교통 등 분야별 수요를 수용하는 시설 확충 사업, 대규모 토지 개발보다는 건축물과 시설 건립사업을 위주로 건설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CERIK

인천 - KTX·제3연륙교 등 SOC 확충, 구도심 재생 공약

홍 현 기 | 경인일보 경제부 기자

유 정북 신임 인천시장의 건설 관련 공약은 교통 환경 개선, 구도심 재생, 신규 산업 유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같은 공약이 실현되면 건설경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최근 유정복 시장의 교통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약 실현 방안을 내놴다. 유 시장의 대표 교통 공약으로는 경부고속철도와 수인선 어천역 부근을 연결하는 ‘인천발 KTX 연결’이 있다. 시는 해당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경기도와 업무 협약(MOU)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내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인천발 KTX사업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

다. 수인선과 경부고속철도 사이 4.8km를 잇는 데는 국비 1,538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인천시는 유 시장의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역 연장’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도 밟고 있다.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달라고 재신청했다. 해당 사업이 추진되면 인천지하철 2호선 석남역~공항철도 청라역 10.6km 구간에 철도와 6개 정거장이 건설된다. 국비 60%, 시비 40% 비율로 사업비는 1조 2,33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시는 2016년 관련 계획을 확정·고시한 뒤 2021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연

특집

민선 6기 지방자치시대의 건설 공약 리뷰

제한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도 방향이 나왔다. 올해 안에 GTX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해 기존 송도~청량리 노선을 송도~잠실로 변경하고,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의 예비 타당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인전철 인천~구로역 27km구간을 지하화하는 데는 4조 2,000억원이, GTX 건설에 4조 6,000억원이 필요하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제3연륙교 건설사업은 인천시가 선(先)착공 방침을 내세웠다. LH에 제3연륙교 설계 용역비 200억원을 우선 지급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우선 사업을 추진한 뒤 공사비 등에 대해서 협의하자는 것이다. 인천 영종도와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는 국토교통부가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적자 보전금을 인천시가 부담할 것을 요구해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다.

유정복 시장은 선거 당시 구도심 재생과 관련한 건설 공약도 내세웠다. 인천은 신도시와 구도심 간 격차가 크게 벌어져 지역 균형 발전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루원시티 한류문화창조특구 조성, 도화지구 도심형 테마파크 건설, 서북부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이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에 도시재생사업추진본부를 신설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부산시의 창조도시본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구를 설치해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시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의 공약 실현은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유정복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5대 가치, 17대 정책, 100개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공약 이행 비용은 총 24조원 규모로 추정되는데 시의 재정 상황이 감당하기는 어렵다. 인천시는 최근 7,0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할 계획이다. 2014년 예산 규모 7조 8,372억원에서 7,000억원 정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천시 자산 매각 작업이 지연되면서 감액 추경이 이뤄지게 됐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실현 가능한 공약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인천시는 오는 9월 공약 추진 계획 보고회, 10월 공약실천계획 시민보고회 등을 거쳐 11월 민선 6기 공약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민선 6기 공약에 건설과 관련된 공약이 어떻게 제시될지에 지역 건설업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원도 - 평창올림픽 시설 및 교통 인프라 구축에 주력

하 위 윤 | 강원일보 기자

20

11년 보궐선거로 도지사에 당선된 후 재선에 성공한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민선 6기는 산

적한 건설 현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임기 내 국제 행사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러야 해 앞으로

경기장 건설, 교통망 확충, 각종 편의·부대 시설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또한, 강원도의 숙원사업인 동서고속화철도, 동서고속도로 등의 추진 및 완공 등도 주요 과제다.

최문순 도지사 당선으로 현직의 이점을 살릴 수 있고 그동안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한 부분에 대해 건설업계의 기대감이 크다. 특히,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지역 업체에 이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던 만큼 동계올림픽 관련 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최 지사는 지난 4월 도내 건설업체 및 중소기업과 두 차례 간담회를 열고 지역 업체의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지역의무공동도급 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도내 여러 중소기업의 공사 참여 기회가 늘어나도록 분할·분리 발주도 시행키로 했다. 특히, 도를 비롯한 각계의 실무진이 참여하는 ‘지역업체확대TF팀’도 구성,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지역 건설업체들은 최 지사가 재선에 성공하며 이 같은 활성화 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선 6기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 최문순 도정은 1기 출범과 함께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오색로프웨이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선정 등 3대 현안을 핵심 과제로 선정해 추진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지난해 2월 해결했지만 동서고속화철도와 오색로프웨이는 마무리에 실패, 최문순 도정 2기에서도 과제가 됐다. 이미 2차례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동서고속화철도 추진은 비용·편익(B/C)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 문제점으

로 인해 국비 확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동서고속도로 역시 당초 목표로 내세웠던 2014년 완공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최문순 도지사가 선거 기간 내세운 각종 건설 공약들도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붙고 있다.

아울러 최 지사는 춘천, 원주, 강릉에 각각 춘천타워, 원주 드라마단지, 동해안 차이나타운 등 ‘3대 랜드마크’를 조성해 국제적인 관광쇼핑문화타운으로 성장시키는 방안 등 18개 시·군별 특성화 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나 강원도 18개 기초자치단체 중 15곳이 새누리당 소속으로 정치적인 협력 문제도 난제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다.

최문순 지사는 건설 관련 공약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 중심의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 민선 6기 시작 이후에도 정부 부처를 방문해 내년 국비 5조 7,000억원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강원도 관련 SOC 사업 예산은 총 2조 5,438억원이다. 이는 도가 신청한 2조 9,992억원 중 84.8%만 반영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도가 60억원을 신청한 동서고속화철도 사업비에 대해 44억원을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70억원을 신청한 여주~원주 전철은 20억원이 반영됐고, 제2영동고속도로는 도의 신청액 3,500억원보다 1,000억원 많은 4,500억원, 동서고속도로 동홍천~양양 구간(신청액 3,700억원)은 1,365억원, 동해고속도로(신청액 2,053억원)는 1,434억원이 반영됐다. 도가 신청한 액수 전액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결국, 2018년 평창올림픽을 통한 강원도 도약은 물론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도로, 철도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가 더욱 확대돼야 할 것이다. CERIK

특집

민선 6기 지방자치시대의 건설 공약 리뷰

충북 · 대전 · 충남 · 세종

충북-철도·도로·산업단지 등 조기 완공, 지속 추진

원 광 희 | 충북발전연구원 지역발전연구부 수석연구위원

충 충북도는 도민들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고 희망찬 도민 행복시대 실현의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도민 행복'을 주제로 7월 1일 각계각층 대표 인사와 도민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4대 이시종 도지사 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취임식에서 이시종 지사는 충북 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2020 세계화 전략'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제 규모 3%대 벽을 뛰어넘어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전국 대비 4%대로 진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4년 간 투자 유치 30조원, 일자리 40만 개, 연간 수출 200억 달러, 고용률 72%를 달성하겠다고 천명하였다.

민선 6기 충북도정은 '함께하는 충북'이라는 민선 5기 도정 목표를 중단 없이 이어가면서 충북도정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이자 최고의 가치인 '도민 행복시대'를 최우선 목표로 실현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도는 그동안 닦아온 '경제 1등 도' 기반 위에 안전, 복지, 문화 등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선 6기를 시작하는 이시종 지사의 공약을 통해 살펴본 충북도정의 방향은 1) 모두가 행복한 평생 복지, 2) 세계로 향하는 창조경제, 3) 도농이 하나 된 균형 발전, 4) 다함께 누리는 감동 문화, 5) 사람이 소중한 안전·소통 등 5개 분야로 정리될 수 있다. 이 중 세계로 향하는 창조경제와 도·농이 하나 된 균형 발전 2개 분야가 SOC와 관련성이 높은 분야라 할 수 있다.

우선 세계로 향하는 창조경제를 위해 도민 소득 4만 달러 시대와 전국 대비 충북 경제 4% 실현, 투자 유치 30조원 달성 등 탄탄한 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닦아온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기반으로 바이오와 태양광, 화장품·뷰티와 유기농산업 등 세계적인 창조경제를 충북이 선도해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화장품·뷰티산업단지 조성, 스포츠산업 및 의료기기산업 전문 단지 조성 등 충북형 특화산업 조성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및 해외 유턴 기업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성공

적 추진과 지역별, 권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두 번째, 도농이 하나 된 균형 발전을 위해 영동에서 단양까지 도시와 농촌, 청주권·비청주권이 하나 되어 고루 상생하는 균형 발전을 이뤄내 도민 모두가 행복한 '함께하는 충북'을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영동에서 단양까지 하나 되는 생활·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만나질 내에 소통이 가능한 충북을 건설하고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임기 내 완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함께하는 충북' 운동 확산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대폭 확충을 통한 기초생활권 지원과 다양한 형태의 마을 만들기 활성화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민간 주도의 함께하는 충북 운동을 확산시키고 지원할 계획이다.

SOC 분야 중 도로는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서청주) 6차선 확장, 영동~청주~제천~단양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임기 내 완공, 세종~괴산~안동 간 고속도로 착공 등 고속도로와 국도, 국지도 건설을 통해 충북의 지정학적 위치를 십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철도 분야는 청주~충주~제천~서울~청주를 순환하는 충북순환고속철도망과 이천~감곡~충주~괴산 중부내륙선철도 건설, 충북선 북청주역 신설 등을 제안하고 있다. 수자원 및 에너지 분야는 충주댐 공업용수도사업 추진과 더불어 단양읍내까지 LNG를 공급하고,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종합경기장 및 실내체육관을 확대 보급하며, 충북도민야구장 증설과 2017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청북도는 금년 7월 1일 통합 청주시의 출범에 따라 새로운 전환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민선 6기의 도

정 철학은 매우 중요하다. 충북도는 도내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 민선 5기 '함께하는 충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달성하기 위해 좀 더 균형적이고 실질적인 충북 정책 방향을 추진해 왔으나, 통합 청주시의 출범에 따라 비청주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청주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부권·북부권에 대한 발전 전략과 지원 대책의 지속 추진이 요구된다. 높은 발전 역량을 가진 청주권의 파급효과를 타 권역으로 공유·확산한다는 방안은 좋으나, 성장 동력과 인프라가 부족한 타 권역간의 공유 및 확산은 쉽지만은 않을 것이기에 기본적인 성장 동력 향상을 위한 발전 전략과 지원 대책이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조기 건설이다. 이는 민선 5기에 역점으로 추진하여 왔던 사업으로 균형 발전의 전제 조건인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충북은 남북간 단절로 인해 권역간 교류가 되지 않고 있으며, 같은 도민이라는 동질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충청내륙고속화도로(단양~청주~영동)의 조기 건설이 해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단절된 지역간 도민 소통과 동질성 강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전제 요건인 것만은 확실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 중인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이 필요하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청주(오송바이오밸리지구, 에어로폴리스지구)와 충주(에코폴리스지구) 지구 등 3개 지구로, 청주권의 오송과 오창의 IT, BT산업 발전의 파급 효과가 중부권을 거쳐 북부권역까지 확대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특집

민선 6기 지방자치시대의 건설 공약 리뷰

대전 - 원도심 재생,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엑스포공원 재창조

장 철 기 | 한남대학교 교수 ckchang@hnu.kr

새로이 들어선 대전광역시 민선 6기의 주요 21대 공약은 대부분 시민의 안전, 일자리 창출, 시민 참여 확대 등과 관련되었다. 민선 6기의 21대 주요 공약 중 원도심 재생,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및 엑스포 과학공원 재창조, 시립병원 설립 등이 주요 건설 관련 공약으로 분류될 수 있다.

대전시에는 총 166개소 11.6km²의 정비사업 구역이 지정(2012년 기준)되었으며, 그동안 약 460억원을 투입하였으나 사업 추진은 미미한 실정이었다. 이에 민선 6기에서는 ‘떠나는 도심’에서 ‘돌아오는 도심’의 슬로건으로 도심 재생을 적극 추진하여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원도심 주거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민선 6기에서는 도시 재개발 방식을 전환하여 신도시 개발을 억제한다는 입장이다. 즉, 진행 중인 신도시 계획은 그대로 추진하겠지만, 추가 신도시 건설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아파트 중심의 획일적 방식을 탈피하여 현지의 특성과 수요자 및 사업자가 원하는 방식으로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도시 재생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2012년 11월 예비 타당성을 통과하였다. 하지만 건설 방식 및 기종과 관련하여 지난 민선 5기에서 고가 자기부상열차로 결정·발표했지만, 민선 6기에서는 노면(트램) 방식을 공약

으로 내세워 당선돼 도시철도 2호선 방식에 대한 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 추진도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민선 6기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과 기종 재점검에 들어가면서 정부에서는 대전시의 정책 혼선으로 인해 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를 내년 국비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대전시가 내년도 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기본설계 용역비)로 정부에 요청한 143억원을 2015년 정부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8~9월에 기본설계를 발주한 뒤 내년 하반기 실시설계, 2016년 본격 착공할 예정이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최근 사업 면적 총 344만 5,000m²에 달하는 신동·둔곡 거점지구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그동안 그린벨트에 발목을 잡혔던 과학벨트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엑스포공원 재창조 사업은 엑스포 기념 공간(13만m²), 첨단영상산업단지(10만m²), 국제전시컨벤션지구(3만m²), 사이언스파크(33만m²) 등 4개 구역 개발에 총예산 9,267억원(국·시비 7,627억원, 민자 2,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다만, 사이언스파크 조성에 있어서 사이언스센터 중심에서 사이언스 콤플렉스(복합, 종합)로 변경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사업자의 사업 제안 내용의 약 80%가 수익을 전제로 한 상업시설인 점을 변경하여 공공

부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의 방침을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이라, 민자 사업자의 참여가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각지에 시립병원과 지방 의료원 등 34개의 공립 종합병원이 있으나 대전은 공립 종합병원이 없었다. 이에 대전시립병원 건설공사를 2018년 내로 착수할 예정이다. 위치는 의료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원도심에 건설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5,400억원, 행정도시~대덕테크노밸리 도로 건설 548억원,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150억원, HD드라마타운 조성 325억원, 재정비 촉진사업 지원 1,178억원, 대전역·와동IC 광역 BRT 27억원, 장애인 체육관 건립 40억원 등을 요청했으며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올해 2조 1,147억원보다 853억원 많은 2조 2,000억원으로 잡고 있다. CERIK

충남 - 환황해권 경제 중심 지향하는 인프라 확충

정재호 |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안 회정 충남도지사는 지난 선거 당시 “공약(空約)을 하지 않고 정직한 정치로 신뢰받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즉,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표를 얻기보다는 지킬 수 있는 공약(公約)으로 정직하게 경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선거 당시 제시한 9대 분야 50개 과제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와의 협약·답변, 현장 방문 지시 사항, 정책자문위원 건의 사항, 새누리당 정진석 후보 공약 등을 검토하여 151건의 공약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다. 향후 추진 과제별 실천 계획 수립을 통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안희정 지사는 충남도를 21세기 환황해권 경제시대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핵심 공약으로 충남 서해안의 항만 개발을 통한 국제 물류 거점 지대로의 도약을 내세웠다. 당진항 송산지구 일반

부두를 조기에 건설하고 석문국가산업단지를 다목적 부두로 개발하는 한편, 대산항을 자동차·화물·여객 등 다기능 무역항으로 개발하고, 보령항을 다기능 복합항으로 확대·개발하는 등 항만 개발 추진을 약속했다. 충남도는 지난 7월 1일 당진항 송산지구 일반 부두 민간 개발을 위해 당진시, 한화건설, 당진해운 등 민간 기업들과 협약식을 가지는 등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2서해안고속도로(부여~평택), 당진~천안 고속도로 등 도로 인프라 조기 확충과 서해선과 장항선의 복선 전철 조기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글로벌 친환경 자동차산업과 2차전지 부품소재산업 육성 등 新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및 기업 유치 등도 포함되었다. 내포 신도시, 당진 송산, 천안아산 탕정의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복

특집

민선 6기 지방자치시대의 건설 공약 리뷰

합적 정주 여건을 갖춘 상생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기존 전략 산업의 혁신과 고도화 추진을 위해 천안아산 KTX역 인근에 R&D융복합집적지구 추진, 황해권 디스플레이 메가클러스트 구축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충남 섬 지역의 휴양·관광·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충남 도서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시행하고 서해안 스포츠·레저산업 육성 및 관광휴양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민선 5기에서 추진되었던 3농(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 혁신을 보완해 계승 발전시킬 예정이다. 농어촌 주민이 주체가 되어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향토 문화를 전승하면서 도농 상생 교류를 통해 모두가 잘사는 공동체 사회를 실현시키자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충남 북부권을 첨단산업 중심의 생산·교역 거점 광역 도시로 육성하고, 충남 서해안을 환황해권 교역 전진기지 및 해양관광 메카로 육성할 예정이다. 또한, 내포 신도시와 공주역세권의 新성장 거점 중심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

고, 금강권을 역사 문화 첨단산업이 함께하는 도농 복합 생활 공간으로 조성하는 금강 비전을 계획하고 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통복지와 주거복지 확대가 공약에 포함되었다. 농어촌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체계(DRT)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도시형 마을 만들기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며, 고령자·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신혼부부·학생·1인 가구 등 수요 대응형 주택 및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 외에 안 지사는 내포 신도시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건립,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복지 정책, 장애인의 자립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복지 인프라 확충,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및 중소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청년 일자리 창출, 베이비부머 세대 및 노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공약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선도하는 충청남도'의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CERIK

세종 - 실질적 행정수도, 균형 발전의 모범 도시로 건설

정 재 호 |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이 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세종시 설계자로 통한다. 참여정부 시절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과 초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역임하면서 세종시 밑그림을 그렸기 때문이다. 이제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를 만들어가는 운영자로서 중대한 임무를 맡은 셈이다. 후보 당시 시장이 되기 위

해 공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약을 수행하기 위해 시장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는 말을 언급했었다. 그만큼 공약에 대한 애착심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선거 직전까지 9가지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미래 세종시 비전을 제시했었다. 궁극적인 목표는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 세계의 본보기가 되는 21세기형 최고 도시, 균형 발전과 도농 통합의 모범 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 성격인 시민참여위원회가 12대 시정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을 위한 100대 과제를 선정했다.

최우선적 시정 목표는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국회 분원 설치와 청와대 제2집무실 유치를 통해 세종시 중심의 국정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 프레스센터 유치, 노무현 대통령의 구상을 기념하는 공원 조성,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등 신설 부처 및 안전행 정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약을 세웠다.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세종시로의 이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어 공약 실현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민들의 공감에 함께 이루어져야 되기에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지역의 현안 문제로는 세종시 예정 지역이 아닌 조치원을 비롯한 10개 읍·면 지역과의 균형 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이다. 이춘희 시장은 소외되고 있는 조치원 지역을 2025년까지 인구 10만의 청춘도시로 탈바꿈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조치원 원도심 7개 권역을 도시재생사업으로, 4개 권역은 신시가지로 조성하는 등 11개 권역을 순환 개발하며, 서창천과 조천 수변 공간 정비와 생태 중심의 조치원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조치원 지역의 교통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1동서횡단도로를 확충하고 제2동서횡단

도로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세종시 예정 건설 지역과 조치원의 연계 강화를 위해 BRT로 연결하고, 천안과 청주 복선전철사업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서창역과 조치원역 간의 BRT 연결 등 교통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치원의 현 시청 부지 개발과 제2청사를 겸한 15층 규모의 복합 행정타운을 조성하고, 주거복지 개선을 위해 공공 임대아파트 건립 및 소규모 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또한 도시 난개발 방지와 읍면 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장기 미집행 도로 조기 집행 및 신도시 생활 편의시설·주차장·복합 커뮤니티센터 등 도시 기반시설 확충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10대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세종박물관 단지를 조성하고 작은 도서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세종시를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로 만드는 목표도 세웠다. 2018년까지 국제보건기구(WHO)로부터 안전도시 인증을 받아 각종 재난을 예방할 계획이다. 신도시 부실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제를 도입하고 도시건축심의 감독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조치원 지역의 도심재생사업시 재해예방 도시설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러한 공약 외에 제2경부고속도로 조기 착공, 중앙 부처 공무원 생활 기반시설 확충, 타 지자체와의 관계 설정, 세종청사 규모 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 중앙정부와의 소통 등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현안 과제가 산적하다. 현재 세종시는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이춘희 시장의 역량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집

민선 6기 지방자치시대의 건설 공약 리뷰

대구 · 경북 · 부산 · 경남 · 울산

‘창조경제특별시’- 대구, 도심공단 재생 등 눈길

전영기자 | younger@yeongnam.com

민선 6기 권영진 대구광역시장과 대구시의 핵심 구상은 ‘창조경제특별시’이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창조경제 관련 공공기관과 연구소를 유치하는 한편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도심공단 재생사업 등 기존 사업에다 균형 발전을 위한 부도심 개발 등 신규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창조경제특별시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 중 하나는 지난 2009년부터 진행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완성이다. 오는 2038년까지 대구시 동구 신서동 대구혁신도시 내에 건설되는 침복단지는 총 4조 6,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다. 현재 3개 국책기관과 48개 의료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나, 앞으로 국책기관 3개, 의료 기업 72개를 더 유치해 입주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수성구 수성의로지구도 진행 중인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특화 전문병원과 연계한 체류형 의료관광 기능을 도입한 지역 의료관광산업의 중심지로 개발하는 한편 차세대 SW 융합 클러스터 조성 등 IT·SW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구축과 더불어 수준 높은 주거 환경 및 생활 편의시설 등을 건설하

게 된다.

제3공단과 서대구공단의 산업 구조 고도화를 통해 산업·문화·환경이 접목된 도시형 복합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도심공단 재생사업도 민선 6기 대구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서대구공단은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뷰티나 헬스케어 등 도심 친화형 산업으로 개조한다.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성서 1차 산업단지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기숙사형 오피스텔을 건립할 예정이다. 또한, 85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용·복합 타운도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조성한다.

대구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북도청 이전으로 남게 되는 도청 이전 후적지 14만 5,203㎡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의 문제다.

여러 가지 사업안이 제시됐지만 현재 가장 유력한 것은 ‘창조경제타운’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미래형 ICT 기반 용·복합 신산업 육성을 기본으로 창조경제타운을 조성, 대구의 경제 심장부로 재구성한다는 것. 오는 2018년까지 국비와 시비 3,500억원

을 투입해 창조경제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은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창조경제타운을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 제·개정이 필요하며, 지역 공동화 방지를 위해 도청 건물을 임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균형 발전을 위한 부도심 개발’은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켜 부도심별 육성을 꾀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국비 6,000억원을 비롯해 1조 2,0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대구시는 메트로폴리탄 도시로서의 다핵 중심지 체계 구현과 내부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대구 중추 도시 생활권 인접 시·군과의 교류 촉진, 상생 발전을 위한 연계 거점 형성을 위해 부도심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칠곡은 유통·상업·업무·주거 중심으로, 안심은 유통·주거·휴양형으로, 달서는 산업·생산·유통·주거 중심으로, 성서는 첨단 산업

과 주거·교육 중심의 부도심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부도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 및 개발 후 보지와 연계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사업비 2,789억원이 들어가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8.77km도 2015년 공사 발주(기본 및 실시 설계 포함)하고 2016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4차순환도로 중 미개통 구간인 성서~지천~안심 간 34.5km의 조기 개통과 1,98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북구 산격동 종합유통단지~이시아폴리스 간 3.4km 6차로 도로 건설에도 나설 계획이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범물 종점 구간에서 대구스타디움과 대구혁신도시를 연결하는 13km 연장 사업도 2105년 상반기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기로 했다. CERIK

경북-도청 신도시와 동해안 선도 프로젝트에 중점

전 영 기자 | younger@yeongnam.com

민 선 4기부터 경북도를 이끌고 있는 김관용 도지사는 민선 6기를 통해 지금까지 구상해 온 경북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한편 미래 먹거리 산업을 완성시킨다는 구상이다.

오는 2027년까지 2조 7,000억원을 투입해 인구 10

만명이 거주하는 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은 모두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도청 및 도의회 신청사 건립을 비롯해 상·하수도 시설 등 신도시 기본 인프라 조성을 끝내게 된다. 2단계로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주거용지와 상업시설 등 정주

특집

민선 6기 지방자치시대의 건설 공약 리뷰

여건을 조성하고, 3단계로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대학과 레저 및 서비스 시설 등 도시 자족 기능을 확충해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도청과 도의회 신청사 공사가 마무리되고 내년 상반기 이전이 완료되면 도 산하 공공기관 등의 건축과 이전도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 공사도 이어진다. 내년 4월과 2016년 6월 준공 예정인 안동 및 예천 방향 진입도로 이외에도 내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 신도시 진입도로로 사업비 510억원이 들어가는 의성~도청 간 4.6km 구간 공사와 구담~신도시까지 1.9km 구간 공사(140억원), 풍천면소재지~신도시 간 0.5km 구간 사업(38억원)도 진행된다.

또 하나의 역점 시책은 미래 바다시대를 대비하여 동해안 발전 전략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해양 미래 성장 동력 발굴로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것으로 잡았다.

동해안권 발전을 위해 2020년까지 8조 4,606억원을 투입해 47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 아래 민간 자본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는 2,114억원의 사업비를 통해 28개 사업 추진에 나선다. 해양과학 기술을 활용한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600억원이 들어가는 차세대 해양산업융합센터를 건립한다. 또한, 동해안에 적합한 해양플랜트산업 기반 조성 및 해양 첨단 신산업을 발굴키로 했다.

어민들의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까지 200억원을 들여 연안 바다목장을 설치하는 한편, 인공 어초와 탄소흡수 바다숲 등도 조성한다. 이와 더불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양 힐링 공간도 다양하게 조성할 계획이다. 포항 해상풍력공원(사업비 100억원)을 비롯해 경주

주상절리해양경관(32억원)·영덕 고래불해양복합타운(200억원)·울진 스킨스쿠버리조트(250억원)·울릉 천부해양관광단지(200억원)·울진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1,360억원) 등이다.

이 밖에도 동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물류 거점향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해양 항만 기반 구축에도 힘을 신는다.

지난해까지 1조 2,000억원이 투자된 포항 영일만항 인프라사업의 남은 사업들을 빈틈없이 추진하는 한편 항만 연계 교통망 확충에도 나선다. 또 지역 실정에 맞는 연안항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2020년까지 548억원을 들여 후포항에 1,000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도를 건설키로 했다. 울릉 사동항에도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연속사업으로 진행 중인 5,000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 및 여객부두 건설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가속기 클러스트'를 기반으로 첨단 R&DB단지 조성을 통한 동해안 첨단과학·그린에너지 비즈니스 거점 구축에 나선다.

세부적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국비 4,185억원 등 총사업비 4,685억원을 들여 양성자 가속기 R&DB단지를 조성한다. 특히, 1조 5,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양성자 가속기 2단계 추진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경북 포항시 일원 7,000㎡에 2,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방사광 가속기 연관 산업 비즈니스 타운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조성한다. 포항 블루밸리 등 산업단지와 연계한 벤처타운 및 기업지원센터가 들어서게 된다. 

부산-사상스마트밸리 조성, 동남권 신공항 유치

심 형 석 |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부 산광역시 내에서도 지역간 격차가 존재한다.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서부산은 해운대가 중심인 동부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었다. 부산은 낙후된 서부산권이 발전하지 않고서는 일자리 문제, 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문제, 그리고 경제 성장의 문제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이런 차원에서 1975년 준공된 사상공단은 서부산권 개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사상스마트밸리'는 옛 사상공단 일원에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센텀시티를 뛰어넘는 쇼핑, 문화, 엔터테인먼트, 주거 및 낙동강 권역까지 연결하여 서부산권의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복합 프로젝트다. 사상스마트밸리 조성에는 약 2조원(국비 3,500억원, 시비 1,500억원, 나머지는 민간 자본 등으로 조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사상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먼저, 사상공단을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지정해야 하며 관련된 개발 계획, 그리고 용지 매입 등 임기 내 구체적인 실현도 만만치 않다. 오히려 기획 단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사업의 기반을 철저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용지 매입과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에만 5,00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 조달의 문

제 또한 계획 단계에서 철저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다. 이러한 개발 계획이 부진할 경우 사업비의 70%를 넘는 민간 자본 유치는 물 건너 갈 것이다.

동남권역의 뜨거운 감자인 신공항 유치를 다시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유치가 실패할 경우 사퇴하겠다는 배수진까지 쳤다. 이전과 다른 점은 신공항을 독립된 별개 사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부산권 개발과 기존의 여타 사업들과 연계하여 '글로벌시티 조성'으로 동일 사업화하였다는 데 있다.

핵심 시설은 정부와 부산시가 재정을 투입하고 민간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어 나머지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기존과 똑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는 데는 점수를 줄 수 있다. 특히, 입체적 관점에서 기능 보완을 통한 기존 개발사업과의 연계는 창의적이다. 하지만 사업이 커진 만큼 실패의 확률은 오히려 높아졌다. 총11조원에 이르는 자원의 조달 방식과 항만 배후도시 조성은 또 다른 개발 사업으로 부담을 가중시킨다. 여전히 정치적인 변수가 많은 사업이다. 지역간 갈등의 조정과 함께 현실적인 대안인 플랜B가 필요할 것이다.

종래 재건축과 재개발로 대표되는 도시 정비 방안은 부산에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2014년 6월 현재 262개의 도시정비구역 중 27개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는 부산이 원도심을 비롯한 기존의 시가지들의 쇠퇴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개

특집

민선 6기 지방자치시대의 건설 공약 리뷰

발의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나 재산권 제한, 그리고 갈등 등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도시정비구역은 도시재생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거 복지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지방의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성 부족에 있다. 이를 단순히 재정을 투입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25개 지역만을 대상으로 개소당 50억원을 투입한다는 공약은 시범 사업적인 성향이 짙다. 각 정비구역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추진 방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매몰비용의 해결이 필요하다.

신항만과 신공항이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통 계획이 필수적이다. 특히, 도로망 계획이 중요하다. 부산은 도시계획상 3개의 순환형 도로망과 6개의 방사형 도로망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도로망은 신항만과 신공항의 배후 수송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공약에는 신공항만 있지 이를 어떻게 물류산업과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인 도로

망 계획이 보이질 않는다. 단지, 낙동강 횡단 교량 건설이나 버스 준공영제를 정착하기 위한 환승센터 확대 설치 및 연계 체제 개선 등 내부 개선에 머무르는 것 같아 아쉽다. 부산의 도로망 계획은 부산, 울산, 경남의 물류비용 절감과 수송 혁신, 그리고 동남권 경제 발전의 혈맥이다. 궁극적으로 해안순환도로와 내륙의 외곽순환도로를 연결하는 장기적 방향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부가적으로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또한 주목된다. 전임 허남식 시장의 공약인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에 대한 입장이 요구된다. 부지조차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건립에 소요되는 3,000억원은 부담이다. 공연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 사항이다. 문화기반 시설의 규모와 외형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 이미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인 '영화의 전당'이 400억원대의 시설 구상에서 시작되어 최종적으로 1,700억원이 넘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다. 커진 덩치만큼 운영 예산도 해마다 뛰어 매년 수십 억원의 적자를 시민들의 혈세로 메우고 있다. 반면교사(反面教師)해야 할 것이다. CERIK

경남-남부내륙철도 등 교통 인프라, 항공산단 조성

심 형 석 |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재

선에 성공한 신임 도지사의 공약은 부산에 비해서는 짜임새가 있으며 다양하다. 보궐선거

에서 당선되었고 집권 1년 정도 만에 어느 광역단체장들보다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경남 신임 지사의 지역 격

차 해소 공약의 1순위는 남부내륙철도(거제·김천)이다. 합천, 의령, 진주, 사천 등 낙후된 서부 경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남부내륙철도사업은 낙후 지역 균형 발전과 국민 대통합,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대선 당시 여야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조기 착공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성이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대도시 지역과 낙후 지역에 동일한 평가 방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문제이며 가중치의 범위가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2순위 지역 격차 해소 공약은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항공산업 최대 집적지인 사천·진주 지역에 항공산업 특화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8년 완공 계획이다. 이 지역은 국토부가 2014년 3월 지역특화산업단지로 선정한 상태이다. 하지만 지원 방식을 국가산단으로 조성해 적극 지원할지, 아니면 일반산단으로 조성하되 정부가 정책적으로 우선 지원할지를 하반기에 결정,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산단 지정을 바라는 경남도의 경우 최근 구역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부지 형태가 좋지 않아 사업 시행자인 LH공사의 참여가 힘들 수도 있다는 우려이다. 하지만 구역 재정비로 인해 기존의 일반산단(사대일반산단, 축동일반산단, 대동일반산단)이 지정 취소될 경우 민간 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3순위는 서부청사 건립 및 공공기관 이전이다. 낙후된 서부 지역의 행정 서비스 제공과 서부권 개발의 중추기관으로 도청 서부청사를 개청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할 계획이다. 경남도의 서부청사는 2015년 하반기 경남 진주에 들어서며 정무부지사가 상주할 예정이다. 1년 전에 폐쇄한 진주의료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서부청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부청사에는 3, 4개국 단위 부서가 이전할 예정이며 이로 인한 행정 불편이

예상된다. 오히려 본청 부서의 이전은 최소화하고 산하기관의 이전을 확대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서부권 개발에 더욱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진주의료원을 리모델링하여 재활용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나 반대측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함양·울산 고속도로의 밀양·울산 구간(45.2km)이 2014년 3월 착공했다. 총사업비 2조 2,000억원으로 2020년 말 개통 예정이다. 경남 서북부 낙후 지역을 관통하여 개발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금년 착공된 밀양·울산 구간은 밀양시 산외면과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을 잇는 도로이다. 이 구간은 대부분 험준한 산악 지형으로 이뤄져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주변 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체 연장의 77%가 교량(8.5km)과 터널(26.5km)로 건설된다. 국비사업으로 조기 완공이 관건이다.

경남은 교통 공약이 많다. 특히, 면적은 경남의 절반이 넘지만 인구는 22%, GRDP(지역내총생산)은 17%에 불과한 서부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다. 창녕·현풍간 고속도로 확장사업 또한 주목된다.

이 사업은 달성군과 창녕군의 지역 현안 사업으로, 고속도로 확장과 대합IC 설치로 총사업비 1,208억원이 투입되고 2015년 착공해 2020년 완공 예정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대구 쪽에도 도움이 되지만 경남의 경우 창녕의 대합IC 인근에 위치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등 입주 기업들에게도 시너지효과를 발휘해 지역 경제를 견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광사업에도 크게 기여하여 주변의 유명 관광지가 활성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사업 주체인 한국도로공사가 대합IC 반영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총사업비 20% 초과로 타당성 조

특집

민선 6기 지방자치시대의 건설 공약 리뷰

사 재심사 대상에 해당될 우려가 있고, 대합IC 설치에 대한 공사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년 정부 예산에 실시설계비 18억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남도의 의견을 실시설계 용역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경남의 주거 환경 개선 정책 공약은 특이하다. 철 지난 반값 아파트가 다시 등장한다. 반값 아파트의 규모는 20평형대 704가구다. 이 아파트가 주목 받는 이유는 사업비가 3.3㎡당 300만원대이기 때문이다. 원래 2013년 부결했던 사안을 지사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2014년 4월 승인을 해주는 등 행정의 일관성을 잃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아파트의 사업 방식은 민간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용도 변경해주는 대신 일정 부지를 기부

채납 받아 임대 아파트를 지어싼 값에 분양(임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정업체가 가진 땅을 용도 변경해 아파트를 짓게 하고 부지를 기부채납받아 반값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누구나 가능한 일이다. 각 지자체에 유사한 사업이 신청될 경우 행정 혼돈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이는 현행 국토관리 계획의 토대를 흔들 수 있다.

따라서 경남이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려던 본래의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이나 서울의 시프트와 같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구조가 나와야 한다. 현재와 같이 일회성 행사에 가까운 사업은 주변 아파트 가격 안정이나 서민 주거 향상에 도움을 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CERIK

창조도시' 울산 - 산업기술박물관 · 오일허브 사업 등 기대

김 창 식 | 경상일보 경제부장

‘품 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지난 7월 1일 출범한 민선 6기 김기현 울산시장의 시정목표이자 슬로건이다.

임기 내에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구현해 현재 118만명에서 200만의 도시를 준비하겠다는 것이 김기현 시장의 취임 일성이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시정은 ‘창조’라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접

목해 울산을 새로운 차원의 도시로 재건하고, 나아가 교육 · 문화 · 관광 인프라 확충과 산업도시의 안전을 확보해 도시의 품격을 높여나가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주력 산업 성장 한계, 신성장 사업으로 돌파

김 시장의 선거 공약은 △맘껏 기업하고 노동자와

서민이 따뜻한 울산 만들기, △ 안전도시 으뜸 울산 만들기, △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창조도시 울산 만들기 등 3가지 정책 방향 아래 세부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 가운데 토목·건설 분야의 역점 추진 사업은 국립 산업기술박물관 건립 등 5개 국가 예산 투자사업, KTX 역세권 및 강동권 개발, 진하마리나항 개발 등 대형 민자 개발사업,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사업은 공업센터 지정 50년을 넘어서면서 주력 산업의 성장 한계로 도시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울산의 경제·사회·문화 등 도시의 핵심 기능의 질적 향상과 시민의 삶의 질이 높은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다.

특히 국가 예산 투자사업 중 국립 산업기술박물관 건립(사업비 4,500억원), 울산산재모병원 건립(4,300억원), ICT 융합 Industry (1,825억원),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6,965억원), 울산항(본항~신항) 진입도로 개설(1,971억원)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추진 중인 현안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예비 타당성조사를 수행 중이거나 앞두고 있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울산 유치가 확정된 국립 산업기술박물관은 울산의 대선 공약 1호 사업으로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대표하는 산업수도 울산의 위상에 걸맞은 규모로 건립이 시급하다. 울산 산재모병원 건립은 자동차, 조선 등 국가 기간산업에 종사하는 40만여 만 근로자들의 산업 재해 예방과 산재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이 역시 대선 공약 사업이다.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국비와 민자 등 3조

4,309억원을 투자해 울산 남항·북항 일원에 석유 저장 기지를 갖추는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은 21세기 '동북아 에너지 허브'로 발돋움하려는 울산으로는 가장 절실한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비와 민자유치, 석유 거래 관련 금융 인프라 구축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임기 동안 치적을 위한 보여주기 식의 무리한 사업은 지양하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에 대해 철저한 실행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겠다. 국가 예산 확보도 중요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건설업계, 부양책 기대

울산 지역 건설업계는 민선 6기 지방 정부에 서민 경제와 직결돼 있고 고용 유발과 소비 진작 효과가 큰 건설경기 부양책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지역의 주요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데는 국내 경기 침체 외에 국가 예산 확보 부족으로 인한 투자 재원 고갈과 이로 인한 지자체의 공공공사 발주 물량의 축소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울산 지역의 공공공사 발주 물량은 최근 수년간 연 20~50% 가량 감소한 데 이어 올 들어서도 6월 말까지 전년 동기 대비 54.3%나 줄었다. 지역의 성장 재원인 국가 예산 확보도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정부가 울산에서 거둬간 국세(내국세+관세)는 2012년 20조 7,714억원에 달하지만, 울산이 교부 받은 국가 예산은 1조 7,062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울산 건설업계는 지역 시설공사 관련 예산 확대 편성, 대형 공사의 분할 발주 및 지역 업체 참여 확대,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 및 적정공사비 책정 등 지역 업체 지원 방안을 울산시 등에 건의해 놓고 있다. CERIK

특집

민선 6기 지방자치시대의 건설 공약 리뷰

전북 · 광주 · 전남 · 제주

전북 - '사람과 돈이 모이는 300만 도민시대 기반 구축'

장 성 화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송 하진 신임 도지사의 취임과 함께 출범한 민선 6기 전라북도는 '한국 속의 한국! 전북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사람이 모이는 전라북도 - 1억명 관광객 전북 방문', '돈이 모이는 전라북도 - 2배 이상 도민 소득 달성', '전북의 자존심 회복 - 300만 도민시대 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도정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농업농촌 삼락정책', '토털관광 시스템 구축', '탄소산업 4대 전략', '행복한 복지·환경', '새만금 조기 개발'의 5대 키워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 중에 있다.

민선 6기 전라북도는 지역 발전의 전환점에 서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사람과 돈이 모이는 지역을 조성하여 도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새롭고 희망찬 지역으로 바뀌 나가기 위한 지역 발전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지역의 미래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핵심 시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첫째,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생산과 소비 활동을 지원해주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새로운 전략의 마련이다. 새만금 개발, 탄소산업 육성, 농식품산업 확대, 관광 개발 등 새로운 지역개발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어, 이에 맞춰 전북의 SOC를 종합 진단하고

지역 여건에 가장 적합한 추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2030년을 목표로 한 전라북도 SOC 확충 전략 마련은 300만 도민시대의 밑그림을 더욱 공고하게 해줄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북 1시간 생활권 달성을 위한 SOC 확충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항·항만 조성, 전북 관광 활성화를 위한 테마 교통망 확충 등 구체적 실행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둘째, 지역 개발의 현안 문제인 도시재생과 중추 도시권 육성이다. 도시재생 선도 지역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전주, 정읍 등 도내 주요 거점 도시의 도시재생 전략 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읍·면 지역에는 아트타운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추 도시권에는 순환 교통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하여 도시간 협력과 교류 증진을 통한 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해 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주권 순환 교통체계를 확충하고, 중추 도시권과 시·군 간의 네트워크 도로망을 강화하는 한편,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광역도로망 구축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 인프라인 국제공항과 새만금항만의 적극 추진이

다. 김제공항 이후 지지부진한 전북도내 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제5차 공항개발장기종합계획'에 국제공항 건설을 반영시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새만금 신항만은 관련 예산의 적기 확보를 통해 2021년 개항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넷째, 수십 년 간 전북 지역 개발의 대명사인 새만금 개발의 조기 실현을 위한 대안 마련이다. 새만금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새만금개발청을 중심으로 책임 있게 연차별 투자 계획을 마련하고, 공영개발 방식을 적극 도입해 조기 개발을 서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북도에서는 정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관광단지와 산업단지가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건강하고 안전한 전북 구현

을 위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할 예정으로 재난안전 통합 지휘권의 확립, 재해·재난 위험 지역 안전지도 제작, 재난 안전교육장 설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선 6기 전라북도의 건설 정책은 신규 대형 사업의 발굴·추진보다는 지역의 숙원사업에 대한 조기 실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산업·관광·복지에 관련된 핵심 사업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 공약은 송하진 지사가 민선 4·5기에 걸쳐 전주 시장을 역임하면서 축적한 지역에 대한 실증적인 경험과 도정 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지역 발전의 전환 점에 와 있는 전북의 미래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ERIK

광주-도시철도 2호선 재검토, 공동체 재생 사업 지향할 듯

윤 현 석 | 광주일보 기자

윤 장현 민선 6기 광주시장은 시민단체 운동가 출신으로 기존 행정가나 정치인 출신과는 달리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반감이 강하다. 박원순 서울 시장을 롤 모델로 하고 있어 향후 광주시정은 서울시정과 비슷한 과정을 밟아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 첫 번째 일성은 '도시철도 2호선의 전면 재검토'다. 현재 도시철도 1호선의 1년 적자 폭이 300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현실에서 2호선까지 운영 적자를 낼 경우 광주시의 재정으로 감당이 어렵고, 도시 규모를 감안할 때 브라질의 꾸리치바와 같이 버스로도 충분

히 대중교통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1조원이 넘는 건설비 부담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다. 다만 이미 도시철도 2호선이 주민 합의 속에 노선이 정해진데다 기대도 커 섣불리 포기하기보다는 충분한 명분을 쌓고 추진 여부를 재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취임사에서 "도시는 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와 환경의 관계로 만들어지며 그 가운데 사람이 있다"며, "도시는 도시계획가에 의해 그려지는 것도 아니고 도로나 건축물로만 채워

특집

민선 6기 지방자치시대의 건설 공약 리뷰

지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기존 일부 전문가에 의해 계획이 수립되고, 관료가 정한 기준에 의해 사업자가 지정되며, 이 사업자의 수익을 남기는 구조로 건설 행정이 추진됐다는 것이다. 정치, 관, 기업이 도시를 생산하는 주체의 중심이 돼 환경을 희생시키며 토지의 경제적 가치 추구에 매달린 토건 성장시대에서는 환경이나 녹지도 회색 인프라의 도시 개발을 덮어주는 수단으로 취급되곤 했다는 것이 윤장현 시장의 주장이다.

따라서 윤 시장은 환경과 생태의 가치를 중심에 두면서 승용차를 위하여 자꾸 도로를 건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러한 예산을 쾌적한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 일에 재투자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윤 시장의 취임사

는 민선 6기 건설 행정의 주요 포인트를 잘 설명하고 있다. 환경과 생태를 통한 구도심 재생과 함께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형 건설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사업을 완전히 방치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광주송정역,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금남로 및 충장로 일대, 상무지구 등 신도심 일대 등에서는 민선 6기에서도 건설 사업들이 꾸준히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전남과의 상생 협약을 맺고 공동 추진하기로 한 영산강 재자연화, smart farm(과학영농단지) 조성, 빗가람 공동혁신도시 인근 에너지 밸리 조성 등의 사업에 따른 수요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 도시재생 · 환경생태 · 문화관광에 주안, 대형 사업 자제

윤 현 석 | 광주일보 기자

민선 6기 이낙연 전남지사는 수요에 대한 감안 없이 국가 지원 및 지자체 재정으로 충당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반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사업, 사파리 아일랜드 사업 등을 추진해 왔지만 외국인 및 민간 자본 투자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한 실정이며, 미래 비전도 담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전면 재검토 단계에 돌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이 지사는 향후 인구 감소, 고령화 가속화, 청년층 유출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현재 갖추고 있는 조건들 속에서 내실 있는 도정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먼

저 이 지사의 민선 6기 구호가 ‘생명의 땅 전남’이다. 넓고 깨끗한 들과 산, 바다와 갯벌, 많은 섬과 긴 해안선을 지니고 있으며, 생명의 원천인 식량의 공급 기지는 물론, 생명이 쉬고 즐기며, 치유하고 충전하는 생명 힐링의 기지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 환경과 생태를 감안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 우선 정책이 배제되고, 대신 신재생 에너지, 농축수산업 등 비교우위를 가진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낙연 지사는 “매력 있는 생활 공간 구축, 활기 있는 지역 인프라 재창조, 안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 요

구된다”며, “건설 정책 방향은 물적 양적 기반보다 사람 중심의 질적 기반, 물량 중심의 개발사업보다 도민 편의 증진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개발 방식이 인간 중심 재생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목포, 순천, 여수, 광양, 나주 등 시 지역과 나머지 군 지역의 연계 협력과 균형 발전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신설을 공약으로 내놓아 도시계획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국토 77호선(서남해안일주도로 성격) 관광 자원화, 영산강 수질 개선, 빗가람 혁신도시 내 도로 시스템 완공, 여수~고흥~완도 간 연륙·연도교 건설, 남해안 철도(목포~순천) 고속전철화, 여수 국가산업단지 공장 증설 및 대체 녹지 확보, 무안 공항 활주로 확장, 도시재생건설박람회 개최, 생활 밀착형 도시재생사업(유달산 주변 구도심 공폐가 활용 예술인 마을), 농어촌마을 재정비사업 등이다. 나주 빗가람 공동혁신도시 인근에 대규모 아울렛이 들어서는 것은 물론 중국 관광객의 유입을 위한 여수항, 광양항 등 전남 지역 항구에 대한 보완 공사 등도 예정돼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도로, 항만, 공원 등 기반시설 설

치는 꾸준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민자 유치나 전남도가 직접 투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고 수요를 감안해 가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달 25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시군 도시계획·재생 담당 과장 및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및 도시계획 맞춤 전략 회의를 갖고 성공적인 도시재생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지난 5월 도시재생 선도 사업으로 선정된 목포, 순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성공을 위하여 단계별 실천 방안을 마련해 제시한 것이다. 또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토지 이용도가 높은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의 행위 제한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됨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 이행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광주와 전남의 민선 6기 건설 행정은 크게 도시재생, 환경생태, 문화관광 등 3가지 주안점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광주와 전남이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결 지역에서의 개발사업도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사업을 자제하면서 현재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기반시설 사업을 꾸준히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CERIK

제주-건설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 ‘특단의 대책 시급’

고 미 | 제민일보 경제부장

최 근 2~3년 간 제주 환경은 크게 바뀌었다. 대표적인 것이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관광산업

의 발전, 중국을 중심으로 한 외자 유치 증가다.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과 혁신도시 계획 등이 맞물리기도

특집

민선 6기 지방자치시대의 건설 공약 리뷰

했지만 이로 인해 지역 땅값이 전국 대비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는가 하면 주택시장 내 변화도 뚜렷했다.

건설시장 역시 그런 흐름 속에서 선전해 왔다. 타 지역에 비해 건설업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고용 창출과 연관 산업 생산유발효과 등에 있어 지역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다. 시장이 한정된 데다 대규모 공사들에 있어 지역 참여가 제한적이다 보니 어려움도 많았다. 지난해 두 차례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지역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SOC 투자 물량 감소, 수익성 하락, 유동성 위기 등으로 위기를 겪었다. 미분양 주택 적체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민간 건설 시장은 관광 숙박시설 공사 수주로 지탱하고 있을 만큼 사정이 좋지 않다. 지난해만 제주도에 등록된 종합 건설업체 중 20곳 이상이 폐업하거나 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 '민선 6기' 제주 도정의 경기 부양책에 건설업이 외곽으로 밀려 있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아직 모양을 갖추고 있는 중이기는 하지만 원희룡 도지사의 주요 공약에 건설업과 관련된 내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 역시 '재해 예방 시설 확충' 등 기반 공사에 치우치면서 이에 대한 반응 온도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또 하나 우려를 사는 부분은 건설업 부양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없다는 점이다. 최근 지역 건설의 부진을 감안한다면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지만 현실은 하릴없이 원 도지사의 입만 바라봐야 하는 실정이다.

원 도지사는 중국 대규모 투자 사업 등에 있어 '옥석을 가리기 위한 검토'를 선언한 상태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제주의 외자 유치 현황은 총 18건으로 외자

유치액은 7조 3,000억원 상당에 이른다. 이 중 상당수가 세계 M&A 시장의 큰 손으로 대두된 중국에서 유입됐다. 문제는 이들 자금 유입이 제주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중국 거대 자본에 잠식당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제주 지역 건설업계는 지역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중국 자본 유치를 중국시장 연계를 통한 생산 네트워크 확대 측면에서 현재 관광·의료 등 서비스업 외에 건설업·제조업을 포함한 2차 산업에 무게를 실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실제 제주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투자 유치 사업들에 있어 지역 업체 참여 비율(현행 40% 수준)을 높여주는 등 지역 선순환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수요 독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발주기관의 부당·불공정 행위(예가 산정 때 복수 예비가격 저책정, 품셈·제경비율 등 자의적 조정, 원가계상 누락, 공사비 부당 삭감, 공기 연장 추가 비용 미지급 등)와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 등 지역 현실을 감안한 제도나 기준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특히 혁신도시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정부 주도의 토목공사 등 큰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가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 지자체가 업계의 생활 밀착형 SOC, 제안형 민관 복합 개발, 민자사업 추진 등을 측면 지원하는 방안 역시 주문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녹색 성장을 위해 중산간과 곳자왈 훼손 방지를 위한 확고한 원칙과 기준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